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설명자료

배포일 : 2014. 7. 23.(수) 대변인실 02) 2110-3009



담당부서 :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

■ 사진없음 □ 사진있음

주책임자 과 장 신용해 02) 2110-3366

담 당 자 사무관 최종계 02) 2110-3377

제목 : 7. 23.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일보 보도 관련

□ 2014. 7. 23. 자 한국일보 '교정시설 납품 독점권 주고 35억 챙긴 법무부' 제하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.

□ 보도요지

- 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식품류 등 4개 품목의 독점공급권을 (재)교정협회에 주면서 '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법무부 교정직 간부 및 직원자녀의 학자금, 우수직원 부부동반 여행 경비 집행 등 명목으로 35억 규모의 찬조금을 지원받고, 현직 법무부 직원이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공생관계가 드러났음

□ 설명내용

- 교정본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,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.
- 독점공급과 관련해서는 2006년 감사원 권고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독점공급품목을 축소하여 왔으며, 현재는 2개 품목만 공급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.
- (재)교정협회가 교정간부 및 직원 자녀 학자금과 우수직원 현장견학 경비를 지원해온 것은 (재)교정협회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따른 지출로서 독점공급권 부여에 대한 대가관계가 아닙니다. 다만, 앞으로는 복지지원비 및 각종 행사관련 지원금 지원 관행을 폐지하고, 학자금 지원 등 목적사업의 수혜자를 회비를 내는 교정공제회원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입니다.

- 현직 법무부 직원이 겸임하고 있는 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무보수로 약 520억 규모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 때문에 공제회원을 대표하여 겸임하는 것일 뿐 협회의 예산편성과 집행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겸임 임원수가 과다하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겸임 임원 수 조정을 위한 정관 개정작업을 추진 중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교정기획과 최종계 사무관(☎ 02-2110-337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